



EU 그린 딜 주요 내용과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EU와 한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해 대표 정책으로 제시 한 그린 딜과 그린 뉴딜은 정책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EU 그린 딜 정책의 설계와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우리에게 미칠 경제·사회·환경·법률적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leeyujin2010@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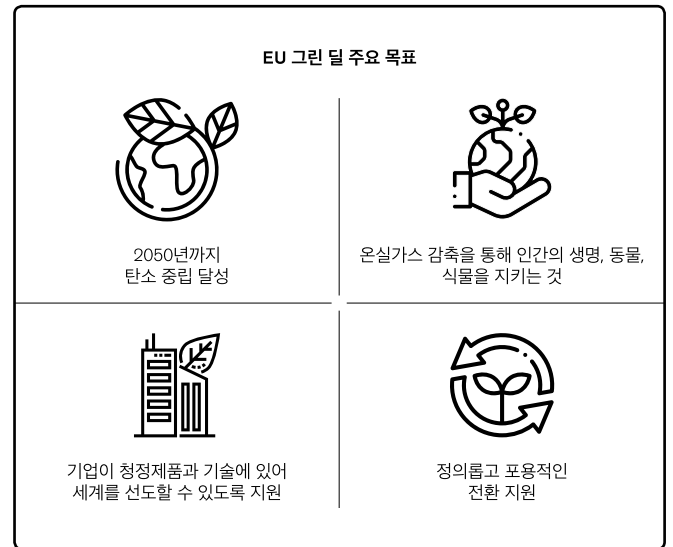
지난해 5월에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 쟁점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었다. 녹색당은 751석 유럽의회에서 4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했고,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에서 주요 정치세력으로 부상했다. 당시 스웨덴의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중심으로 펼쳐진 10대들의 기후행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2019년 12월 11일, '그린 딜'을 통해 유럽연합을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린 딜은 탈탄소 사회를 위한 경제 개혁안으로 2050년 넷제로(Net-zero),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과 탄소국경조정을 골자로 한다.

EU의 그린 딜은 2018년 IPCC(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에서 발표한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라 인류가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40년경 1.5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EU는 한발 더 나아가 파리협정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경제전략으로 삼아 관련 기술과 시장을 주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말까지 수립될 EU 그린 딜 정책은 세계 경제와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

I. 그린 딜, 기후위기를 경제 문제로 접근

그린 딜은 유럽연합의 신성장 전략이다.¹⁾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경쟁력 있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의 '기후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에 명시하고, 2030년 목표를 최소 50%에서 55%까지 강화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2050년 경로 도출을 위한 제도 마련, EU의 모든 입법안에 기후중립 목표 반영, 기후변화적응과 시민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2021년까지 탄소국경조정 도입을 목표로 하고, 2021년까지 신규 기후변화적응 전략을 수립한다. 교토의정서를 준수하면서 2017년 기준 1990년 대비 배출량을 22% 줄이면서 경제를 성장시킨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그린 딜 추진을 위한 투자계획으로 2020년 1월, 10년간 최소 1조 유로(1,401조 원)를 조성한다는 그린 딜 투자계획(EGDIP)을 발표했다. 민간과 공공 투자의 지속적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InvestEU 금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녹색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EU 회원국의 프로젝트와 함께 EU의 자금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²⁾

동시에 탈탄소 경제전환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 지역, 노동자를 돕기 위한 대책도 수립했다. 1,000억 유로 규모의 '정의로운전환메커니즘'을 발표하고, 전환대상에 대한 재정 지원, 전환 계획 수립, 기술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석탄산업에 있어 석탄지역 전환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II. EU 그린 딜 주요 정책

EU의 넷제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은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건축, 교통, 농업, 생물 다양성 보호, 유해 오염물

1) 앤-살트 브루노빌, 유럽집행위원회 에너지총국 국제협력국장 “유럽 그린 딜과 Covid-19 이후의 경제 회복”
 2) 문진영, 2020, 유럽 그린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에너지포커스] 이슈와 시선, 제17권 제2호 통권 76호

질 배출 제로와 같은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한다. 유럽 그린 딜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정책 발표 시점은 <표 1>과 같다.

에너지 부문에서 석탄발전 비중이 관건인데, 유럽연합의 석탄발전량은 전 세계 발전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이래 석탄발전량 27%가 감소했고, 17개 회원국이 석탄발전 중단을 결정했다.³⁾ 그린 딜에서는 에너지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비중확대를 목표로 유럽에너지망(TEN-E) 규정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 규정이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 스마트그리드, 수소네트워크, 탄소 포집·저장·활용과 같은 기술도 모색한다.

산업부문은 순환경제를 기반으로 한다. EU의 재활용률이 12%에 불과해 재활용률을 개선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특히 탄소다배출산업 대책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건물 부문에서는 건물의 에너지 성능지침에 근거하여 회원국의 중장기 전략을 평가하고, 건물을 EU 배출권거래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운송부문에서는 2050년까지 배출량의 90% 감축을 목표로 한다. 화석에너지에 대한 세금감면 제도를 중단하고, 해운 부문 EU 배출권거래제 편입과 항공부문에 무상으로 제공되던 배출 규모를 축소한다. 농업과 먹을거리 부문에서는 유럽 공통 농업 정책(CAP)을 통한 농업과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농식품 분야의 친환경기술 도입과 친환경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전략을 수립하고,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공동농업정책 예산의 최소 40%와 해양어업기금 최소 30%를 기후변화 대응에 할당하고, 회원국들의 국별 농업전략이 그린 딜과 '농장에서 식탁까지' 목표를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표 1. EU 그린 딜 주요 정책

	주요 내용	일정
기후 행동	2050년까지 EU 기후 중립 입법체계의 정교화. 현재 1990년 대비 40%인 2030년 감축목표 50~55%로 상향 추진	
생물 다양성 보호	EU의 모든 정책은 유럽의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데 기여. EU산림 전략 마련 예정	2020년 생물다양성 전략, 2021년 실행계획 제안
지속 가능한 농업	공동 농업 정책(CAP)을 통한 농업 및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 증진. 농식품 분야의 친환경기술 도입과 친환경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전략. 공동농업정책 예산의 최소 40%와 해양어업기금 최소 30%를 기후변화 대응에 할당. 회원국들의 국별 농업전략이 유럽 그린 딜과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 목표 반영하도록 함. 식품에 대한 지속가능한 소비 독려	
정정 에너지	에너지 부문이 온실가스 배출의 75% 차지. 에너지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비중확대. 유럽에너지망(TEN-E) 규정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 규정이 탄소중립 목표와 양립 가능함을 검토하며, 스마트그리드 수소네트워크 탄소포집·저장·활용과 같은 혁신기술 활용 제안	2021년 6월까지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법 개정, 회원국 2023년까지 국별 에너지와 기후변화 계획에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목표 반영
지속 가능한 산업	순환경제 및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산업전략. EU의 재활용률이 12%에 불과해 재활용률을 개선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 적극 추진. 순환경제는 에너지 집적산업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핵심.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 및 제품 개발을 통해 관련 시장규모를 확대하며,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	EU 산업정책과 순환경제 실행계획 발표 예정
건물과 개조	2020년 중 건물의 에너지 성능지침에 근거하여 회원국의 중장기 전략을 평가하고, EU ETS(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에 건물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2020년 중 EU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이니셔티브 제안
지속 가능한 이동성	2050년까지 배출량의 90% 감축 목표. 화석에너지에 대한 세금감면 제도를 종료하고, 해운 부문 EU ETS(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편입과 항공부문에 무상으로 제공되던 배출 규모 축소. 자율차량 및 커넥티드 차량 개발과 스마트 도로 관리시스템. 2025년까지 제로 배출과 저배출 차량 1,300만 대를 위한 공공 충전시설 100만 개 설치. 대체연료인프라 지침과 유럽교통망(TEN-T) 규정 새로 검토	2020년 중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수송전략 마련 EU 차원의 Mobility as a Service(MaaS) 개발. 2021년 6월 자동차와 밴 CO2 배출기준 재설정
독성 없는 환경 오염 배출 제로화	오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줄이는 조치. 2021년 물, 공기, 토양에 대한 제로 오염 실행 계획 제시, 대규모 산업화 시설에서 오염 측정 방식 재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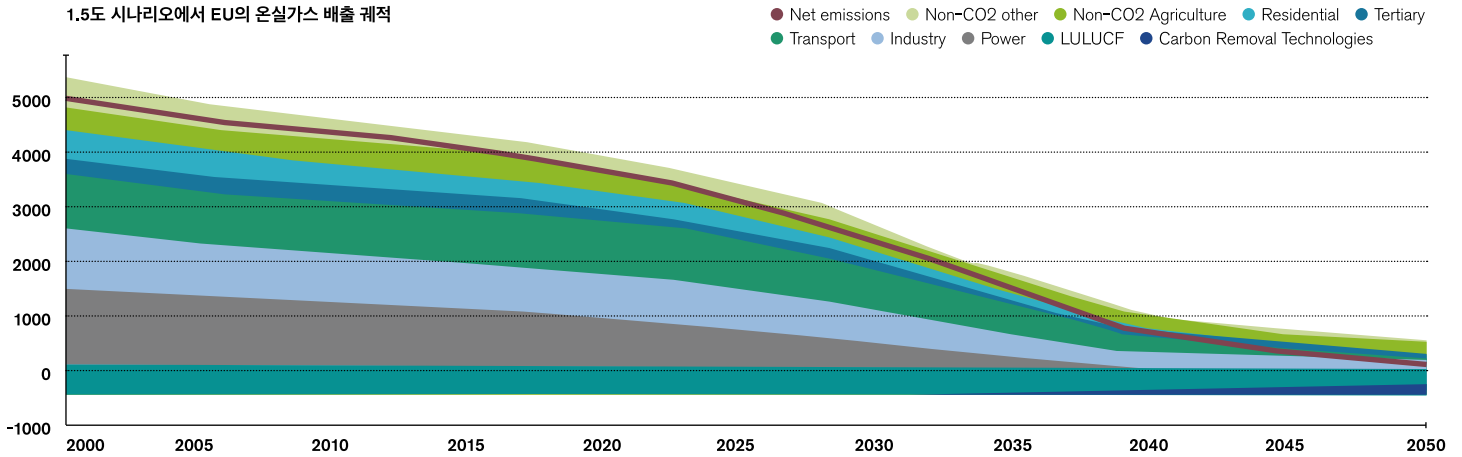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19, A European Green Deal

III. 2050년 넷제로 과제와 탄소국경조정

유럽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차지한다. <그림 2>는 1.5도 시나리오 달성을 위한 EU의 2050년 넷제로 온실가스 배출 궤적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유럽 그린 딜은

3) 2030년까지 유럽연합(EU) 기존 석탄 발전 용량의 48%를 단계적으로 퇴출할 예정

1.5도 시나리오에서 EU의 온실가스 배출 궤적



출처: EUROPEAN COMMISSION, 31.10.2019, COM(2019) 559 final

탄소중립·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다. 지금까지 EU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성과를 살펴보면 운송, 농업, 건물 부문의 배출량 감축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⁴⁾

2050년 목표 달성을 위한 2030년 감축도 중요한 쟁점이다. EU 국가 가운데서 폴란드는 전기의 80%를 화석에너지에서 생산한다. 독일은 여전히 석탄발전 비중이 높다. 철강, 플라스틱, 시멘트와 같은 중공업 산업은 감축이 쉽지 않지만 순 배출 제로를 향해야 한다. 이미 경쟁이 치열한 국제 시장에서 철강의 생산 비용이 20~30% 더 높고 시멘트 및 화학 물질의 경우 20~80% 더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계를 설득하고 참여시키는 것도 큰 숙제다.

EU 집행위는 역내 수입품에 탄소배출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EU의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탄소누출⁵⁾이나 EU 역내 산업 경쟁력 약화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은 WTO 규정에 부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선별된 분야에서 시작

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⁶⁾

현재 EU는 주요교역국을 대상으로 정책이 미칠 영향에 대해 사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 경제단체는 무역 보복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2020년 7월 1일 ‘한-EU 탄소국경조정 관련 가상 타운홀 미팅’이 개최되었는데, 한국무역협회는 “탄소국경조정은 WTO 비차별원칙을 준수하기 어렵고, 한국은 배출권거래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서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⁷⁾

IV. EU 그린 딜이 우리 법제에 미칠 시사점

EU 그린 딜은 세계 경제와 통상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7월 14일 한국판 뉴딜로 그린 뉴딜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73조 원을 투입해 환경 친화 일자리 66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에 책

4) <https://www.weforum.org/agenda/2019/07/how-can-the-eu-hit-net-zero-emissions/>

5) 탄소누출(carbon leakage)은 기업들이 탄소배출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느슨한 국가로 이전해 생산 활동을 함으로써 한 국가에서 관련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지 않는 현상

6) GATT 제20조 특히 20-B와 20-G에 의거한 환경적 예외사항에 따르는 것이므로 탄소국경조정은 산업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조치가 아닌 환경 조치에 초점을 맞춰야 WTO 규정과 충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 필자도 7월 1일 한국에서 열린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한국-EU 무역파트너와의 가상 타운홀 미팅에 참여하였음



임을 다하는 ‘그린 선도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EU와 한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해 대표 정책으로 제시한 그린 딜과 그린 뉴딜은 정책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EU 그린 딜 정책의 설계와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우리에게 미칠 경제·사회·환경·법률적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EU의 2050년을 넷제로를 목표로 하는 기후법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그린 뉴딜 기본법의 위상과 내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그린 뉴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린 뉴딜 기본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2050년과 2030년의 감축 목표가 어떻게 담길 것인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수단을 어떤 방식으로 담보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기존 녹색성장기본법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EU가 그린 딜을 통해 경제사회 정책 전반에 탈탄소를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EU의 관련 규제와 지원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탄소국경조정을 어떻게 설계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국내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탄소 순수출국으로 분류



되어서, 국내 기업들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경영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에너지, 산업, 수송, 농업 전반에서 탈탄소 전환을 기획해야 한다.

셋째, EU의 그린 딜은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도 그린 뉴딜 실행을 위한 재정과 자원 마련을 위한 법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린 뉴딜에 투입되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자원 마련 방안으로 탄소세 도입이나 녹색금융기관 신설 관련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산업, 건물, 교통,

농업 등 부문별로 관련법 개정 보완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 합의에 따라 2030년까지의 기후변화 대응 기여방안(NDC)과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장기저탄소발전 전략을 마련해 2020년 12월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재생에너지확대를 위한 정책과 제도, 탈석탄, 탈내연기관 시점 설정과 관련 제도 마련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기반 뉴딜을 이야기함에 따라 그린 뉴딜이 자치와 분권과 연계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법제화도 준비해야 한다.

이처럼 EU 그린 딜 자체로 우리나라 경제와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 우리가 그린 뉴딜 정책을 수립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기에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국내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빠른 속도로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문진영, 2020, 유럽 그린 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에너지포커스] 이슈와 시선, 제17권 제2호 통권 76호
- 앤-샬럿 브루노빌, (2020) 유럽 집행위원회 에너지총국 국제협력국장 “유럽 그린 딜과 Covid-19 이후의 경제 회복”
- EUROPEAN COMMISSION, 2019, A European Green Deal - Striving to be the first climate-neutral continent 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_en#documents
- EUROPEAN COMMISSION, 31.10.2019,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Preparing the ground for raising long-term ambition EU Climate Action Progress Report 2019, 출처: Brussels, COM(2019) 559 final,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52019DC0559&from=DA>